더민주 '6월 경선' 추진…국민의당 3~4월 조기 경선론

빨라진 대선 시계…야권 경선시기 '뜨거운 감자' 부상

국민의당, 제3지대론 연계
9월 이후 후보 확정 주장도

야권 잠룡들의 대선 도전 선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선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경선 시기가 야권의 대선 구도를 뒤흔들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각 당의 경선 시기가 잠룡들의 거취는 물론 전체적인 야권의 대선 판도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현재로선 조기 전대가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추미애 대표는 당권 경선 과정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선을 마치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바로 경선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연말까지 룰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5월 중순에나 경선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소속 단체장들이 경선 참여를 위해 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9월16일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됐던 것에 비해 3개월 이상 당겨지는 것이다. 더민주 당헌은 대선 후보 선출시기와 관련,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며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등 후발주자들은 조기 경선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다. 경선이 빨리 시작되면 현재의 '문재인 대세론'이 곧바로 경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없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9월 후보 경선이 적합하다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 진영을 제외한 당내 잠룡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조기 경선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말들이 많다"며 "경선 시기의 적합한 결론 도출이 대선과 관련, 추 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아직 비대위 체제지만 국민의당에게도 대선 후보 경선 시기는 '뜨거운 감자'다. 국민의당에는 대선 경선 시기가 외연 확대 등 제3지대론과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내년 3~4월 조기 경선과 9월 경선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조기 경선론은 더민주보다 먼저 경선을 실시, 국민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우선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야권 연대 및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권 통합론 등 외부 요인에 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경쟁할 만한 주자를 당내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적 '흥행'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제3지대 등 다른 길을 찾기는 더욱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론'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이르면 8월 말에 경선을 실시, 9월 말에나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더민주의 친문(친 문재인) 구도를 깰 수 있는 강력한 제3지대 용광로 경선을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잠룡들의 이해가 다른데다 국민의당이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경선 시기는 결국 야권 대선 구도와 민감하게 연계될 것"이라며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경선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가 심은 동백나무 어루만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왼쪽) 당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이 심은 동백나무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대선주자 '광주 대전'

손학규 "죽을 각오로 저를 던지겠다" 대권도전 선언
안희정 "호남의 정신, 김대중 정신이 도전에 큰 힘"

야권의 심장부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2일 들썩였다. '우연의 일치'인지 야권 지도부 인사들과 대선주자들이 대거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이 곳으로 몰려들면서다. 특히 이날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광주에서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하는 발언을 던져 광주를 더욱 달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열린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을 문화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아끼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의 정신,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정신,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를 쓴 개혁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내년 대권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최근 중간지대 인사들과의 잇단 회동에 이어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를 잇따라 만나는 등 정계복귀 후 행선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안 지사도 이날 광주를 방문해 호남 정신을 강조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연 특별강연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강연 전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은) 제가 10년 전에도 똑같이 했던 말이고 계기적으로 특별히 주목하거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진 않다"면서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호남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저의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특강 후 사회 전반적 문제를 연구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의 모임인 '무등 공부방'(이사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번 초청 강연은 여수YMCA, 국제와이즈맨 전남지구 여수지방 주최로 열렸으며 300여명의 여수 시민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5일 광주로 옮겨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더민주 광주시당을 방문한다. 또 무등공부방을 찾은 뒤 저녁 7시30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한 차례 더 초청강연을 한다.

한편, 1일부터 2일까지 광주를 찾은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2일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한껏 '낮은 자세'를 취하며 텃밭 민심 회복에 나섰다. 추 대표는 '광주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더민주가 야권의 적통임을 강조했다. DJ 3남인 김홍걸 당 국민통합위원장도 동행했다.

'호남 며느리'를 내세운 추 대표는 아울러 한달에 한 번씩은 호남을 찾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남특위 위원장도 직접 맡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베를린 장벽 찾은 안철수 "남북통일 꿈꿔 봅니다" 국제가전전시회 IFA 참관 독일 방문

독일을 방문 중인 안철수 전 대표는 4일 독일 베를린장벽에서 "통일이 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남북이 아무런 차이도 못 느낄 정도로 동화되는 미래를 꿈꿔 봅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냉전 시대에 동과 서를 나눴던 장벽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도심 한복판에 홀로 섬처럼 서 있습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또 "포츠담 광장은 베를린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고층건물도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베를린장벽 일부가 주위와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며 "역사의 흔적 앞에 서서 통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고 올렸다.

안 전 대표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참관차 같은 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지난 2일 독일로 출국했다. 안 전 대표는 5일 귀국한다.

출국 전 안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독일의 경제 구조와 정치 체제를 배워오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은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혁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全당원투표제 채택…국민의당 당원 권한 강화

당헌·당규 개정 마무리…'당원투표 요구권' 신설

국민의당이 당헌에서 전(全)당원투표제를 채택한 데 이어 당규에서도 당원투표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당원 중심의 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4일 박주선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는 이번 주 당규 개정안을 제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들이 서명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면 전 당원투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당원투표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당원들이 특정현안 등에 대해 당 대표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질문권'과 당원들이 정책 발의를 하면 정책위의장이 이를 반영하는 '당원발안권'도 도입된다.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을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하는 '당원소환제'도 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를 견제하는 중앙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중앙위가 명령하면 최고위가 특정 사안을 보고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국민의당은 당규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 안건으로 당헌·당규를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